



제 306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9. .

도 시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진환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며 부설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권 발행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2, 제25조3)
- 나. 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
- 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7조)
- 라. 공공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규정함. (안 제29조)
- 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1)
- 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1의2)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자료 : 붙임3

다. 관련부서 : 주차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4. 8. 23. ~ 8. 29.(6일간)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와 3을 신설하여 공공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발행 대상 및 환불규정을 신설하였고, 월정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공공부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현실과 맞게 재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안내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란에 긴급자동차를 전액 면제하고 목으로 정렬하였으며, 공공 부설주차장 요금표 별표1의2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 부설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본 조례안과 같게 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24. 1.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 비 용 추 계 서

### 1. 재정수반요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재정 수반 요인

##### -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 제2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 제4조 제2항)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렵지만, 현재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이동지원 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을 해당 교통약자에게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며, 이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음

\* 민간위탁금: 24년 7,089백만원(국589, 도1,950, 시4,550) /  
23년 5,373백만원(국373, 도1,500, 시3,500)

- (개정안 제20조 제1항) 본 개정안에 기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항(제4조제1항)이 동일하게 이전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이 없음

###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박 진 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혜택 확대 협조 요청

1. 귀 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시·군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혜택 확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혜택 확대 협조 사항》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비율 확대	
- (기존) 2자녀 이상 요금 50% 감면 → (변경) 2자녀 이상 요금 10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역 범위 확대	
- 해당 시·군 거주 제한 폐지를 통한 요금 감면 도 전체 확대 적용	

4. 아울러, 시·군별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혜택 확대 추진 검토 결과를 붙임2에 따라 2024.6.1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시·군별 조례 개정 여부, 추진현황 등 재요청 예정

- 붙임 1. 다자녀가정 시·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현황 1부.
2.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혜택 확대 추진 검토(서식) 1부. 끝.

별표 1의2 중 2.주차요금 감면 감면구분 50% 아목

## 판례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 2944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건물의 구 소유자인 소위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 무까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당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례 참조).

조례에서 사용료의 징수 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조례 입안 시 징수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견제시 사례

대전광역시동구조례에서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사용료만 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얼마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사용료 징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어린이의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동구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5, 28, 회신 14-0111 의견제시 사례).

## 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으나 사용료·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 또는 요건을 정할 때에는 사용료·수수료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 공공시설의 목적,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 등을

## 지방자치단체의 시민합창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문】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립합창단 사업의 일환으로 합창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합창지도를 제공하는 바, 해당 사업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부서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	이현석 031-590-2475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명 : 시립합창단 시민합창교실 운영</li> <li>○ 일 시 : 매주 1회 / 2시간</li> <li>○ 장 소 : 11개 읍면동 13개소(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li> <li>○ 주최/주관 : 남양주시/남양주시립합창단</li> <li>○ 수 강 료 : 무료</li> <li>○ 사업대상 : 남양주시민</li> </ul>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li> <li>○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li> <li>○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li> </ul>		
질의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합창교실 수강생에게 무료로 합창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li> <li>○ 시민합창교실 수강생에게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포함) 청사 부설주차장, 도서관 부설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li> </ul>		
부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향유여건 개선을 위해 아래 각 호 목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무료로 시민합창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li> </ul>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
2.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3.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참고자료 1. 2023년 시립합창단 시민합창교실 운영 계획(안)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하생략)

### ◆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외부공연 수입금 및 출연료) ① 생략  
② 예술단은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또는 학교 등이 주최하는 공연공연이나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질의서에 기재된 법령 외에도 해당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추가하여 고려함.

(2023. 11. 30. 남양주시장 질의)

## 【 답 】

### 1. 문 1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등 법령(이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시민합창교실 수강생에게 무료로 합창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참가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문 2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3. 12. 6.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별표 1의2 중 2.주차요금 감면 감면구분 전액면제